

國防費의 O.R.的 分析

An Operational Analysis of Defense Expenditures

元 殷 常*

Abstract

The recent issue on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Suggests an Urgency of Self Defense of [Korea. The expected huge defense budget and her armed forces create a need for an operational analysis.

It is shown through a statistical analysis what some of the opportunity costs of defense spending have been. Some evidences about what some of the economy sacrifice if defense spending rises have been analyzed to provide executive departments with a quantitative basis for decisions.

The Korea-U.S. alliance is discussed in view of the developmental effects of U.S. aids and deterrent effects of U.S.F.K.

1. 序 論

본 연구는 國防費와 GNP, 정부 및 민간소비지출, 투자비등 제경제요소와의 相關性을 분석하여 國防費가 國民經濟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國防費 負擔能力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經常市場價格에 의한 1975년도 國防費는 4,462억원으로 이는 국방비가 최초로 推計된 1953년의 25억원에 비하면 무려 18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¹⁾. 이 기간동안 經常價格에 의한 國防費의 추세는 53년에 25억원, 55년에 55억원, 57년에 110억원, 62년에 204억원, 66년에 400억원, 70년에 1,000억원, 74년에 2,900억원, 그리고 75년에는 4,4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방대한 軍隊는 우리생활의 一部가 되었으며 國防은 통상 韓國經濟의 壓迫要因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연 우리의 군대와 국방비는 經濟規模에 비하여 過多한 것인가?

* 陸軍本部

註 1)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71~'75

南北간의 軍備競爭은 國防費의 주된 이유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 즉 국방비는 군비경쟁의 유용한 척도가 된다. 危脅度에 의하여 軍備의 수요가 규정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총생산에 대한 국방비에의 자원할당이 이루어진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支出을 大別하면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자본형성, 수출입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국방비의 규모는 여타요소의 制約을 받게 되고 또한 역으로 기타 경제요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때로는 국방비가 다른 經濟分野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활용할 수 없는 것을 活用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의 프리스효과는 취급하지 않았다.

국방비는 비용이란 관점에서 여타목적에 이용될 기회를 잃는 희생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國民經濟의 어떤 分野가 국방의 增減에 비하여 不均衡하게 영향받는지 보여주며 국방비로 인하여 희생된 社會福祉의 종류와 그 量的인 面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이 세워진다.

제 1 가정은 군비경쟁이 국방비변화의 요인이라는 가정으로서 이를 檢證하기 위하여 軍備競爭모델, 위협분석 및 쌍방의 軍事費支出을 비교하여 그 相關性和 將次的 추세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國防費의 增減效果를 論하였고,

第 2 假定은 國防費의 負擔은 國民經濟에 불균형하게 分擔되리라는 假定으로서 GNP와 국방비, 課稅 및 인플레이에 의한 國防費영향을 論하고, 各 經濟要素別 相關性和 影響度를 定量化하였으며,

第 3 假定은 第 1 假定의 補充의性格으로서 同盟關係가 國防費를 설명한다는 假定下에 同盟關係를 條約, 軍援 및 駐韓美軍이라는 세가지 側面에서 高찰하여 第 1 假定과 關聯된 戰爭抑制效果와 第 2 假定과 연관시킨 經濟的開發效果를 論하고, 軍備競爭 및 國防費負擔의 反應을 둔화시킨 同盟關係에서의 현저한 변화가 國防費에 미치는 영향을 豫測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3個假定을 結合하여 본 연구의 結論과 이를 應用하기 위한 주의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II. 軍備競爭

敵對國간의 군비경쟁이 군사비지출의 중요한 원인입은 널리 인정되는 假定이다¹⁾. 한국전쟁, 김신조사건, 푸에블로호사건, 그리고 최근의 미류나무사건등, 북괴의 끊임없는 도발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妥當性은 自明해 보인다. 그러나 적의 위협이 평가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동맹관계가 갖는 전쟁억제력에 의한 위협감소효과나 이러한 요인이 적용되는 정도 및 군비경쟁의 양상은 더 깊이 분석할 가치가 있다. 근래에 와서 國防費의 增加가 방위세의 형태를 갖고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은 그 以前보다 북괴軍費의 증가에 대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軍援의 증요와 同盟間의 여러 關係가 작용했음이 큰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軍費競爭에 의한 반응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를 數學的 모델化하려는 노력은 Richardson 以來 계속되어 왔으나 이러한 모델은 어떤 것도 적절하다고 인정된 것이 없으며 또한 이론의 적용을 위한 시도는 南北 軍事費의 相關性이 낮음으로 因하여 모델化가 不可能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북괴자료의 허구성이다. 또한 자료자체가 빈약함으로 인하여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둘째, 군비경쟁은 국내사정과 有機的관계를 가지며 특히 정보에 좌우되는 점이며 셋째,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맹국에 의지하여 군비경쟁에 대한 반응도가 낮아지며 넷째, 공격위주나 방어지향이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하여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假定이 前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軍備所要란 관점에서의 지난 십수년간의 쌍방의 군사비를 비교하고 이를 군원삭감과 북괴의 호전성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相對的인 군사력평가에는 雙方의 兵力, 火器 및 裝備의 數와 質을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서 火力指數나 戰鬪效率指數도 결국 기본개념은 이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後者는 前者의 방법이 多元的인 것이므로 이를 一次元에서 비교가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靜態的인 분석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고서도 戰鬪效果를 유사하게 모의함으로써 피아의 상대적 전투력을 평가함으로써 이로부터 적절한 군사수요를 결정하는 위계임기법도 효과적인 군사력 비교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별도의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軍事費支出規模가 軍事力비교의 유용한 척도가 된다고 보아 이로부터 군사비의 소요가 결정된다고 해석하였다.

美武器統制軍縮委의 수석경제적학자인 리가 시바드女史가 세계 12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방, 교육, 보건등 3개분야의 73년도 정부지출을 조사한 「세계국방비 및 사회지출」이란 연구에 따르면 북괴는 一人當 국방비가 우리의 3배인 41불로 나타나 있다. 최근에 발표된 각

1) Bruce M. Russett, "What Price Vigilance?" Yale Press, 1970, pp. 180.

<표 2-1>

군사력 및 군비비교

(1975년 기준)

구분	인구 (단위백만)	병력 (단위천)	인구대비 (%)	국사비 (백만\$)	1인당부담 (\$)	명1인당 군비(\$)	군비의 GNP대비
미국	215	2,086	0.96	102,691	477	49,212	7.0
소련	255.5	3,650	1.42	124,000	490	33,973	11~13
중국	850	3,525	0.41	17,000	20	482	14.8~6.9
서독	59.2	340	0.57	15,220	242	448	3.7
이스라엘	3.5	(상비) 158.5	4.51	4,214	1,204	26,587	35.5
		(동원) 558.5	15.91		1,204	7,545	
한국	35	660	1.71	1,500	43	2,500	5.1
북괴	16.3	(정규) 495	3.40	1,000	61	2,020	15.9
		(비정규-1) 2,335	14.34	1,736	107	743	27.6
구일군	100	8,263	8.26				
일본자위대	112.5	235	0.20	5,058	45	21,523	0.9

출처: 조선일보 76.12.10 "북괴군비의 내막"

<표 2-2> 남북한 연도별 군사비, GNP, 인구 및 병력 통계

(1972년 불변기준)

	년도	군사비 (\$백만)	GNP (\$백만)	군사비 GNP (%)	인구 (백만명)	국민1인 당군사비 (\$불변)	1인당 GNP (\$불변)	병력 (천명)	병력1인 당군사비 (\$불변)	
한국	1963	179.48	4,279.0	4.19	27,100	6.62	158	627	286	
	1964	165.20	4,645.5	3.56	27,800	5.94	167	600	275	
	1965	183.00	4,928.6	3.71	28,500	6.42	173	604	303	
	1966	217.25	5,538.5	3.92	29,200	7.44	190	572	380	
	1967	233.13	5,969.6	3.91	29,900	7.80	200	612	381	
	1968	272.65	6,723.6	4.06	30,500	8.94	220	620	440	
	1969	314.33	7,733.8	4.06	31,200	10.07	248	620	507	
	1970	331.51	8,342.0	3.97	31,800	10.42	262	645	514	
	1971	405.00	9,107.1	4.46	32,400	12.53	281	638	636	
	1972	454.51	9,741.3	4.67	33,100	13.73	294	635	716	
	1973	443.86	11,436.3	3.88	33,800	13.13	338	634	700	
	년평균증가율(%)		11.6	10.3	1.2	2.2	9.2	7.9	0.6	10.9
	북괴	1963	382.00	3,100.0	12.17	11,500	33.20	273	352	1,085
1964		403.00	3,400.0	12.00	11,800	34.13	234	362	1,112	
1965		461.00	3,300.0	14.00	12,100	38.13	272	378	1,220	
1966		449.00	3,700.0	12.07	12,400	36.20	300	383	1,172	
1967		584.00	3,700.0	15.67	13,000	44.93	287	383	1,525	
1968		729.00	4,200.0	17.43	13,400	54.39	312	410	1,778	
1969		701.00	4,600.0	15.37	13,800	50.79	330	410	1,710	
1970		756.00	4,900.0	15.56	14,200	53.26	342	438	1,727	
1971		775.00	5,100.0	15.31	14,600	53.10	347	450	1,723	
1972		500.00	5,300.0	9.43	15,100	33.11	351	460	1,087	
1973		592.00	N.A.	N.A.	15,500	38.18	N.A.	470	1,259	
평균증가율(%)		5.4	6.5	0.5	3.1	2.3	3.2	3.0	2.4	

<자료: MORSK 1975>

국의 군사력과 군비조사에 따르면 표 2-1과 같다. 군사비지출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시점보다 지난 십여년간의 군비추세가 큰 도움이 된다. 1963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남북간의 군사비추세는 표 2-2와 같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북괴군사비의 허구성이다. 북괴는 남북대화 직전인 71년까지 歲出對比31% 이던 군사비를 72년에 별안간 17%로 半減했다고 발표하고 73년에는 15.4%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南北對話 開始와 함께 남침 땅굴을 파기 시작한 북괴가 군사비를 줄인다는 것은 모순되며, 또한 인공유성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는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

이러한 통계를 비교하여 볼 때 군사비지출 하나만 보더라도 북괴의 침략성은 여실히 증명되며 더우기 이를 국민 一人當 부담으로 볼 때는 거의 狂的인 戰爭準備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괴의 非正規軍은 우리의 豫備軍개념과 달리 즉각 전투가능한 것임을 감안하면 북괴의 군사력은 자칫하면 과소평가되기 쉬운 것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더우기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는 만일 철수한다면 그만한 戰力補充所要는 쉽게 豫見될 수 있으며 또한 그 戰爭抑制力 効果を 대치하자면 그 이상의 軍事力建設이 要請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事實을 考慮치 않은 단순한 國防費의 비교는 그릇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定量化된 數值들만 비교하더라도 南北間의 군사비의 지출총액의 차이를 군사비추가소요라 한다면 표 2-2의 북괴 군사비 총액과 우리 국방비의 차액인 12억불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前述한 바 대로 最低線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軍事費에는 相當部分이 무장의 증가보다는 現武裝의 유지에서 오는 운영경비이므로 북괴가 本格的인 군비증강을 시작한 이래의 投資費규모를 판단함이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I.I.S.S.의 보고를 따른다면 북괴의 예상 군사비중 投資比率은 35%, 우리의 투자비율은 15%이므로 純投資

額의 차이는 24억불이 되어 북괴가 현재의 군사력수준에서 정체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³⁾.

Ⅲ. 國防費의 負擔

이 장에서는 국방비와 결합하는 국민경제분야중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국방비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이들이 어떻게 불균형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들 요소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그 영향을 定量的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방비로 인하여 희생된 사회복지의 종류와 그 量的인 면을 발견하기 위한 전제로서 GNP증가와 함께 GNP에 대한 국방비의 배분이 늘어나리라는 가정과 국방비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納稅者란 觀點에서 課稅와 연관시키고 인프레견견지에서 이에 대한 민감도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경제요소와의 상관성이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定量的假定을 設定하였다.

첫째로 만일 국방비와 民需費用이 完全競爭을 한다면 그 상관계수는 높은 마이너스의 수치가 될 것이며, 동일한 요소에 의하여 양쪽 모두가 움직인다면 그 상관계수는 플러스이고 상호보완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경쟁한다면 마이너스의 낮은 수치가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준하에서 주기적인 국방비의 증가는 대부분 개인소비, 자본으로부터의 이전이고 보건의나 공공분야같은 非軍事的인 정부지출은 반응이 약하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군사적인 수요가 감소되는 시기에 있어서 이로 인한 여유자원은 투자나 교육분야로 移轉되지 개인소비가 되돌려지기는 어렵다는 가정이다.

셋째, 불확실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의 생산성이나 자원을 희생하지 않으려 하리라는 가정이다. 이는 資本形成이 국방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는 국방비의 배정이 상대

註 2) 이도연 "북괴군비의 내막", 조선일보 76.12.10 pp. 7.

註 3) 合參企劃局 "자주국방과 국방비" MORS-K 장간호 pp. 89~96.

적으로 감소될 때 투자와 소비중 어떤 부문이 더 많이 증가하는가를 점검하면 알 수 있다.

통상 국방비의 증가는 税金引上과 赤字財政의 결합으로서 財源을 충당받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는 조세부담율이 국방의 부담과 관련이 높으며 각종 세율은 어떤 소득계층 또는 職業群에 따른 계층이 국방비로 인하여 얼마나 부담받는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963년 이래의 조세부담율은 8.9%에서 1975년의 16.4%로 증가되었으며 75년말 현재 재정적자 누계는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¹⁾.

세금의 인상없는 적자재정은 통상 인프레를 유발한다. 임금구조와 물가구조는 어떤 집단이 평균적인 소비자보다 그들의 실질수입에 큰 타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株主나 地主 또는 물가상승만큼의 실질수입의 인상을 보장받는 개인은 최소한의 타격을 받을 것이나 사무직월급자, 연금수혜자, 非組織的이고 약한 노동조합 가입자들은 심대한 취약성을 지닌다. 이러한 분야의 분석은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요하므로 여기에서는 국방을 직접 수행하는 군인, 특히 土兵의 비용에 관하여 고찰하겠다. 그들중 일부는 피로서 국방비를 지불하고 여타인은 군복무로 인한 소득의 상실의 형태로서 국방비를 지불한다. 75년도 全産業平均給與月 46,000원만 고려하여도 면세점이하인 이 급여에서 당시의 생계비 최저기준액 13,000원을 제한 33,000원을 세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²⁾. 이를 逆으로 해석하면 民間經濟가 그만큼 더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박탈당했다는 뜻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징병으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발생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국방의 비용은 정부예산에 나타난 국방비보다 실질적으로 크게 될 것이다. 만일, 병사들에게 정상적인 급료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의 生産性的 손실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러한 근거하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결정과정에서 軍服務를 필한자와 未畢한 자와의 임금수준의 책정에는 별

도의 기준을 두어 군복무기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이며 또는 이를 稅制上에 반영하여 세율상의 차등방법등으로 보상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무기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통상 고도의 숙련, 즉 비싼 노동대가를 치루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軍費의 증대에 따른 방위산업에의 자원할당은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GNP의 범주에 따른 국방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에 관하여 논하겠다. 표 3-1은 민간소비지출등 23개 경제분야의 1953년부터 1975년까지의 23년간 추이를 1970년 고정시장가격의 10억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발행 한국통계년감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다. 표에서의 변수번호는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

1. 민간소비지출
2. 정부소비지출(군사비제외)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
4. 수출
5. 수입
6. 외국원조
7. 식료품
8. 음료품
9. 연료
10. 의류장도구
11. 임료, 수도료
12. 광열비
13. 가구시설비
14. 보건비
15. 교통통신비
16. 유흥요락비
17. 주택
18. 비거주용건물
19. 기타구조공작물
20. 운수설비
21. 기계설비

註 1) 경제기획원 "한국통계년감" 1976. pp. 70.

2) 경제기획원 "한국통계년감" 1976. pp. 234.

22. 국방비

23. GNP

여기에서 변수번호 23인 GNP는 변수 1부터 변수 5까지와 변수 22인 국방비와의 합계이고 변수 1인 민간소비지출은 변수 7부터 16까지의 각 구성요소들에 의한 합계이며 변수 3은 변수 17부터 21까지의 합계이다. 표 3-2는 표 3-1의 자료를 GNP의 구성비율로 표시한 것이며 표 3-3은 이 구성비제원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MEANS는 대상기간인 23년간의 평균치이며 STD는 표준편차, CORR, W.DEF는 국방비와의 상관계수를 표시한다. INTERCEPT와 REG.COEFF는 선형회귀식에서의 常數項과 一次項의 계수를 표시하며 EXPL.VARA는 종변량중 국방비로 설명가능한 퍼센트를 뜻한다. 이들 계수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을 점검하여 둘 다 유의성을 갖는가를 0.05 중요도 수준에서 표시하였다. (중요도 표시) 표 3-4는 구성비제원 상호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표시하며 표 3-5는 대상기간중 戰後기간인 1953년부터 1962년까지의 구성비제원에 대한 통계적 처리결과이다. 표 3-6은 戰後기간의 기본제원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고 표 3-7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인 1963년부터 1975년까지의 구성비제원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표 3-8은 1963년부터 1975년까지의 구성비제원에 대하여 상호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표시한다. 또한 이들 행렬의 비교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前述한 자료중에 특히 관심이 큰 항목들에 대하여 그림 3-1부터 그림 3-11까지의 도표를 제시하였다.

그림 3-4를 보면 國防費對 년도의 커브는 1963년을 최소점으로 하는 V자 모양을 보이는데 GNP와 기타 분야의 요소들도 1963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양쪽의 분포가 현저하게 상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형회귀식을 전체자료에 이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으나 Bruce M. Russett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1963년을 分岐點으로 자료를 양분하면 전체의 설명에서 모호

했던 것이 더욱 명백히 떠오르며 또한 사실상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의 우리의 경제구조는 큰 변혁을 겪었다고 생각되므로 자료의 兩分은 도움이 된다.

그림 3-4의 국방비와 그림 3-5의 GNP 추이를 비교하면 국방비는 V字 모양을 보이나 GNP는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NP 증가율이 현저하게 큰 時點이 국방비의 최소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GNP가 1조 3,000억원일 때 즉 1人當 GNP가 5만원일 때까지는 국방비에 대한 GNP의 할당이 계속 감소하였음을 뜻한다. 全期間을 통하여 국방비와 GNP의 상관계수는 0.86이고 戰後期間인 국방비 감소기간중에는 -0.90, 증가기간중의 상관계수는 0.97로서 이는 국방비가 증가되기 시작한 이래의 국방비증가는 GNP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림 3-10은 국방비의 GNP 구성비를 년도별로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통상 국방비부담을 또는 상대적국방비라고 부른다. 상대적국방비는 국가안보란 공동재(Public goods)에 대한 수요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에 대한 有効需要는 계속 감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同期間中 북괴위협의 증대와 관련시켜 보면 국방자원의 配分은 위협평가란 관점보다 별도의 기준하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된다. 또한 이는 국방비 절대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국방비란 관점에서 국방비의 증가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담은 가벼워졌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상대적 국방비는 그 단독으로 쓰여질 때 그릇될 경향이 있다. 이 비율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그것이 개인당 국민소득으로 표시된 경제력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당 국민소득이 500불이상인 대만이(75년 기준) 10%의 상대적국방비를 가진 것과 우리의 5% 수준과는 같은 기준하에서 논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韓國的인 여건을 고려하고 전세계의 국방비부담율과 一人當국민소득을 고려한 I.I.S.S.의 각국 군사비부담비교(1973)를 검토하면 결코 높은 국방비부담이라는 결론을 얻기 힘들다. 표 3-1을 근거로 하여 GNP와 기타 경제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最下 0.95 이상의 상관성을 지녔음이 판명된 바 이는 국민경제 실태를 설명하는데 GNP가 代表的 尺度임을 實證하였다고 생각된다. GNP와 국방비의 관계는 陽의 상관계수인 0.86을 가졌으며 이는 統計的 有意性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陽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GNP 증가는 국방비의 증가를 가능케 했는가? 또는 높은 국방비는 높은 GNP와 관련이 있는가? 이를 분석하려면 다른 변수들을 固定하였을 때의 상관계수, 즉 편상관계수를 검토함이 도움이 된다. 정부지출효과를 제거하면 GNP와 국방비는 陰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GNP성장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으나 이에 비하여 국방비는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GNP와 국방비와의 관계에서 注目될 사실은 軍援이 감소되어온 시기에 있어서 그 상관계수는 증가되었다는 사실로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GNP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경제요소들과의 상관성도 증대될 것이 예상되며 결국은 國防經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統計的分析表의 EXPL. VARIA는 두개의 비용요소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함께 변화하는가를 알려주고 reg. coeff는 국방비의 一弗 증가에 대하여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reg. Coeff를 해당항목의 GNP 구성비율로 나누어 얻은 比例的 減小指數(I.P.R. Index of Proportionate Reduction)를 또한 중요시하였다⁴⁾. I.P.R.는 각 항목들이 정상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여준다. I.P.R.는 구성비 통계분석표상에서 GNP 1%의 국방비 인상이 받는 피해를 상대적으로 표시한다. I.P.R.는 정책적목적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액수의 감소라 할지라도 875억원의 투자계획에 대한 10억원의 감소는 8,511억원의 소비에 대한 동일액 감소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要約된 통계적분석의 결과와 표 및 도표들은 그 세부내용이 함축된 것이므로 전반적인 설명에 有用하나 년도별 항목별로 그 변화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됨으로 이에 대한 설명도 부가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비의 정당성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로는 국방비는 결코 자원의 낭비가 아니며 다른데 쓰인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치 않은 민간소비지출에 낭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기구매비용이 납세자에게 되돌려진다면 이는 교육이나 보건 또는 공공복리에 쓰인다기 보다 개인소비로 돌려지며 따라서 국방의 비용이란 단지 中産層以上の 사치의 손실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비의 감소기간 중에는 어떤 항목보다도 개인소비가 가장 빨리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국민이 경제적여유가 있는 경우나 타당성을 지닌다. 비록 戰後의 개인소비 증가가 세율의 증가에 비하여 높다 할지라도 이는 당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生計費의 보진이라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開發時期의 개인소비 증가는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소비와 국방비를 연결시키는 즉, 국방을 위한 개인소비의 희생이 최소화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戰後期間中 국방비 1원 감소는 개인소비를 61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 當時의 상관성은 0.57로서 비록 통계적 有意性을 지니지 못했으나 국방비가 계속 53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개인소비는 중대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전반적인 경향은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국방비 1원의 감소는 非軍事정부지출을 39전 증가시키며 투자는 49전 수출은 25전을 증가시키며 수입은 25전을 감소시킨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소비지출은 국방비의 가장 큰 代費費用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상관성은 극히 낮았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만일 순수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상관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며 실제로 軍援終了와 동시에 시작된 방위세는 소비와

註 3) 한국과학원 "무기체계획득 관리의 최적화연구" 1976.1 pp. III-170.

4) 표 3-12 참조

국방을 직접 강력하게 연관시키는 제도적조치라 해석된다. 그림 3-3의 년도별 민간소비지출액을 보면 戰後期인 1962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나(년평균 40억원)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인 62~66년간에는 년평균 60억원, 그 이후 75년까지는 년평균 160억원씩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이를 그림 3-1의 GNP와 비교하면 그 추세가 비슷하며 따라서 양자의 상관계수는 0.997로서 지극히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증가와 함께 우선순위는 국방보다 소비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민간소비지출의 구성요소별로 국방비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국방비 증가시 衣類費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全期間을 대상으로 한 소비활동은 국방비 1원 증가시에 음료비 13전, 연초비 22전, 의류 19 전, 광열 10전, 가구 및 내구재 16전, 보건비 10전, 교통비 41전, 오락 17전의 감소를 초래한다. 국방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와 적자재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이들 항목에 대한 소비활동시에 前述한 만큼의 稅率增加 또는 物價引上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上記品目 中에서 국방비와의 상관성이 낮은 분야는 담배, 의류, 광열, 가구, 보건, 오락비용이다. 이를 逆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소비분야에서 국민경제와 福祉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국방비역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의 성금에 기대하여 오던 防衛減金을 자주국방이 활발히 논의되던 1975년도부터 방위세로 전환하여 사치소비행위에 대하여 기본세액에 대한 20%, 재산세에 대하여 20%, 월소득 70만원 이상인 소득층에 20% 등의 방위세를 부과함으로써 577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실시한 “73년도 산업관련포 작성보고”에 의하면 투입산출표 방식으로 산출한 소비의 생산유발의존도가 56.9%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생산활동및 附加價値의 감소가 예견되며 이로 인하여 GNP가 감소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축적된 資本을 국방목적에 동원하는 것도 경제동원의 한 방법이나 이는 경제잠재력을 해질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투자의 감소는 전

반적인 生産性의 성장을 저해하고 生産容量의 축소를 초래한다. 戰後의 자료는 국방비 1원의 감소가 투자비 49전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全期間을 통하여 투자비는 그 59%가 국방비에 의하여 변량이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투자비는 全期間을 통하여 계속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투자비의 회귀계수가 민간소비에 비하여 낮다고 할지라도 I.P.R로 볼 때는 민간소비는 국방비의 對 GNP 1% 증가시 822억원에서 816억원으로 감소되나 투자비는 83억으로 부터 78억으로 감소되게 된다. 즉 개인소비는 0.7%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투자비는 9.2%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표 3-9의 I.P.R.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未來의 생산은 현재의 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경제의 미래 자원과 경제력의 기초는 국방비에 의하여 심각하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相對的으로 국방비가 높았던 戰後期에는 투자비는 800억원 내외로 그 증가율은 극히 미미하였으나 1964년 이래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참조) GNP에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도 그림 3-9와 같이 64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국방비와 투자비의 상관계수는 -0.77로서 이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유의성을 지닌다. 固定資本形成의 구성요소를 보면 이러한 설명은 더욱 명백해진다. 표 3-5의 變數 17, 18, 19, 20, 21은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요소들로서 국방비 1원의 증가에 대하여 주택건설은 26전 감소, 非居住建物は 42전 감소, 기타 구조공작물은 74전 감소, 운수설비는 25전, 기계설비에서 58전의 감소가 초래된다.

一國의 國際收支는 국방비 急増時 큰 피해를 받는 부문이다. 우리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잠재적인 수출물자가 內需에 둘러지게 되고 국방비증가로 인한 국내인프라는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자체 무기생산능력이 약한 경우에는 군수장비의 수입을 위하여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戰後에는 수입은 대체로 일정하였으며 국방

비와는 거의 무관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군수장비의 교체 및 주요 運營部品은 軍援에 의존하였음을 상기하면 의문이 해소된다. 그러나 尙後 자주국방을 달성키 위한 무기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생산 가능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국방과 수입의 상관성이 높아지리라고 예견된다. 수출은 GNP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상관계수 0.968). GNP의 수출의존도가 60% 국내생산 유발효과가 총수출액의 1.7배, 고용유발효과가 19.8%, 소득창출효과가 65%임을 고려하면⁵⁾ 수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국방비는 GNP의 어떤 비율로 할당된다 할 때 결국은 수출과 무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즉 국방비의 증가는 수출억제효과를 가져온다고 결론된다.

한국경제와 국방비를 논함에 있어서 외국인조의 영향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군원은 다 음장에서 상세히 설명됨으로 이 장에서는 PL-480을 위시한 GARIOA, ECA, AID 및 CRIK의 습계를 주로 분석하겠다. 그림 3-10의 외원추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대상기간중의 외원총액은 1조 3,000억원으로 同期間의 非軍事政府支出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외원과 국방비는 正의 상관계수를 가지는데 이는 국방비가 높을 때 외원액도 많았다는 뜻이다. 전후기간 국방비 1원 감소는 외원 43천 감소를 초래하였다. 외국인조를 그 자체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그 원조가 없었다면 국내경제가 국방비로 인한 영향을 민감히 받을 것을 둔화시켰다는 뜻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편상관계수의 개념에서 보면 외국인조의 효과는 민간소비지출과 국방비와의 상관성을 낮게하였다고 분석된다.

全期間을 통한 金額上의 국방비와 총정부지출액과는 0.9의 상관성을 지니며 구성비로 볼 때 0.93이란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 이는 정부소비지출은 국방비가 일정하게 주도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총정부소비지출에서 국방

비를 제외한 非軍事的인 정부소비지출과 GNP와의 관계는 상관계수 0.985를 갖고 있다. 이를 국방비가 GNP와 0.86의 상관계수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문보다 非軍事的인 정부지출이 GNP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 된다. GNP에 차지하는 비율로서 본 군사비와 비군사적 정부소비지출과의 상관성은 0.03으로서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위 두 사실은 국가자원의 할당과정에 있어서 국방비와 非國防費는 별도의 기준하에서 결정되며 또한 국방비에 대한 자원분배에 우선순위가 낮았다고 결론된다.

비록 회귀계수 算定시에 그 상관성이 낮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前述한 바와 같이 국방비와 경제분야의 상관성을 저하시킨 經援 및 軍援이 끝나고 더욱이 美地上軍의 철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있음을 감안하면 그 相關性의 증대가 쉽게 예측될 수 있음으로 앞으로의 국방에 대한 자원할당에 있어서 고려될 가치가 있음을 제언한다.

IV. 韓美同盟의 經濟的價値

경제적측면에서 보면 한미 군사동맹관계는 共同財(Public Good)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공산집단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힘의 우산을 확장하고 동시에 한국의 국방력을 그들의 국방력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강국의 보장을 받게 되면 그 자신의 국방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아마도 이러한 보장도에 있어서 그 확실성을 제한하고 싶게되며 이는 때에 따라서는 自國의 이익에 反하면서까지 참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에 미국이 正式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1954년 상호방위협정에서 비롯하였으며 그 이래 역대 대통령들과 수많은 관리들에 의하여 거듭 확인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兩側이 피침시에 즉각 참전을 규정하지 않았고 단지 그러한 참여를 준비할 방도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조약상의 모호성은 결정적인 시기에 미국으로 하여금 편리한

註 5) 한국일보 1976. 11. 30 "수출의 문제점"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북괴에게는 誤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우리에게는 이에 의문을 갖고 不安하게 되어 자주국방에 계울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더우기 1971년도에 미군은 비무장지대의 방위에서 빠져 최전선을 전부 한국군에게 넘김으로서 전쟁발발시에 그 지상군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더욱 국방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효과를 낳아 당시에 국방비가 급증케 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때 대통령에 출마한 Mc Govern 상원의원이 천명하길 “아시아는 미국의 중대 이익에 대해서는 단지 미미한 관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발표된 미국방장관의 한국증언은 駐韓美軍의 철수가 임박했음을 보이고 있다.

Olson과 Zechauser가 지적했듯이 한 국가가 강할수록 종국방비에 대한 동맹국의 分擔額은 불균형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동맹관계가 전쟁억제에 성공했다는 뜻이 된다. 사실상 방위협정에 명시된 그리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은 한국이 국방비의 큰 압박없이 3차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완수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 표 4-1은 기간중 군원추이를 보여주는 데 63년이래 72년까지 약 26억불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상의 문제보다 미군의 한국주둔을 전쟁억제란 면에서 북괴위협증가에 대한 반응도를 둔화시켰다는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장차의 자주국방을 위한 소요액을 정할때 단순히 군원에 의한 감소부분만큼 국내재원을 증가시켰다는 자체가 자주국방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북괴가 주장하는 미군철수는 주한미군의 전쟁억제기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를 증명한다. 특히 브라운장관의 한국방위개념이 주로 공군력과 해상수송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우리 국방비는 잠재적인 대륙증가요인을 내포한다고 결론된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없이 거대한 군사력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위하여 어떻게 동시에 자원할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경제가 깊어진 국방비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군원의 평가함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답은 주로 우리 財政과 미국의 군원이 有形的으로 그리고 군원삭감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펴 보면 알 수 있다. 자원이 일정할 경우에 군원삭감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금을 인상해야 하며 이는 개인저축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투자액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년간의 군원은 더 많은 국내자원을 국방보다 경제개발에 투입하게 한 효과를 낳았다고 결론된다.

V. 結 論

要約해서 과거의 국방비와 民需와의 관계는 국방비의 機會費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경제요소들은 국방비에 의하여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 상관성이 더욱 증가되리라는 것이 분석되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제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난 이후부터 급격히 향상되어 왔으나 GNP의 국방에 대한 할당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이를 동일기간중의 북괴 군비증강과 비교할 때 거의 무관함을 나타낸 바 오직 주한미군의 전쟁억제효과와 군원에 의해서만 이의 설명이 가능하였으며 한미동맹관계는 또한 더 많은 자원을 개발계획에 돌릴 수 있게한 수단을 제공하였다고 해석되는 바 逆으로 동맹관계의 변화야말로 우리 국방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결론되며 따라서 경제전반에도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방비는 사회공공복지에 할당

〈표 4-1〉 한국의 군원 및 국방비 추이

단위 : 억불

년	도	1955	1957	1961	1965	1968	1970	1972	1974
군	원	4.2	2.3	2.1	1.3	2.6	2.9	1.5	1.3
경	원	1.0	2.0	1.8	1.1	1.0	0.5	0	
원	화국방비	0.7	1.0	1.2	1.2	1.5	3.1	4.3	8.0

출처 : 합참 전략 기획국

될 자원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소비지출과 국방비는 밀접하였으나 非軍事政府支出과는 거의 무관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방비는 별도의 기준이나 과정을 통하여 책정되었음을 암시하고 또한 국방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된다. 조세부담율의 면에서 관찰할 때에도 1963년의 조세부담율 8.9%에서 1975년에는 16.4%로 증가되었으나 同期間中 국방비는 오히려 4.81%에서 4.56%로 떨어졌다. 이는 국방비가 또는 국방분야의 우선순위가 여타분야에 비하여 낮았다고 해석되며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이나 정부여타부서의 발전에 비하여 국방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았리라는 결론을 낳게 한다.

미국의 군원종료와 함께 신설된 방위세는 본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소비지출의 억제에 목적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또한 소비활동과 국방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라고 분석되었다.

전연구대상기간을 통하여 우리 경제는 1963년을 분수령으로 한 하나의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제분야는 63년 이전에는 점증하는 추세이나 63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활발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방비는 구성비로 볼 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相對的국방비가 점감하는 戰後시기에 있어서 국방비로 부터 이전된 자원의 대부분은 민간소비지출과 非軍事的정부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왔고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기점으로 투자로 동원되었다. 全期間을 통하여 投資는 20배나 증가되었다.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온 상

대적국방비와 이를 관련시켜 볼 때 투자의 계속적인 증가는 국방비의 상대적감소에서 가능했다고 설명된다.

長期的인 안목에서 보면 國力은 높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의존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모델이라 불릴 만큼 국가의 자원을 국방보다 투자에 집중시킨 경제정책은 지난 23년을 분석한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결론된다. 또한 이는 복피가 軍事費에 全力을 투구함으로써 경제력의 필연적인 낙후를 가져온 것과 비교할 때 그리고 군사력 특히 자주국방은 자립경제의 여건이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명백한 결론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韓美同盟効果의 役割이 크며 동맹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원할당 우선순위에 직접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견된다. 즉, 경제력의 軍事力化가 결론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기회비용들이 미래의 완전한 지표나 결정적인 모형으로 곧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는 끊임 없이 변화하며 국제정세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복피군사력에 대한 위협평가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적의 위협을 自力으로 대처해야 한다면 국방비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국방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국방의 부담을 원하는 방향으로 분포시키기 위하여 보다 충분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이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